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2424.48	코스닥	812.19
(+7.52)		(-1.24)	
금리 (미국 9년)	3.206	환율	1278.30
(-0.078)		(-29.40)	

[정치]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주목
08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m-커버스토리

파우치형·원형·각형 등 ‘전기차용 표준화’ 전쟁

배터리 진화, 어디까지

경기 침체가 세계를 덮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소비 위축은 경기를 얼어 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업계가 있으니 바로 ‘배터리’다.

세계 각국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친환경 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세우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 것이 배터리 시장 성장의 주요 배경이다. <관련기사 6면>

국내 배터리 3사로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1분기 합산 매출만 해도 16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분석이 나왔다. 올 한해 누계 추정치는 약 70조원의 매출을 올릴 거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2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76% 성장한 202GWh를 기록했다. 또한 원자재 수급난에도 28개월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배터리 3社 연매출 70조 관측
전기차용 시장 전년비 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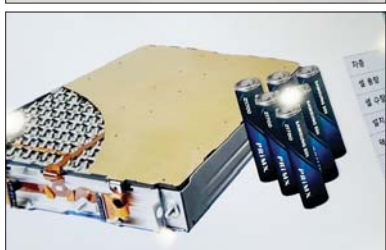
**크기·공정난이도·생산비용 등
형태따라 장·단점도 각기 달라**

◆ “모양새에 따라 각기 다른 매력”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기차의 속도와 운행 가능 거리를 결정하고 혹여나 터질 사고에 대비해 안전성도 중요한 이슈가 때문이다.

배터리는 크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전해질)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배터리는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으로 분리된다.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먼저 ‘원통형 배터리’는 가장 오래된 형태이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지와 같은 모양이다.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이 표준화된 규격에 맞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형태의 배터리들보다 많은 양



LG에너지솔루션의 파우치형 배터리, 삼성SDI의 원통형 배터리, SK온의 각형배터리. /각사

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전통적인 형태로 생산비용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부피당 에너지 밀도도 높다. 특히나 안정적인 수급으로 완성차 시장을 공략해 왔다.

하지만 전기차 장착을 위해서는 원통형 배터리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 구축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이어 ‘파우치형 배터리’는 전극을 셀과우치로 감싼 모양이다. 배터리를 둘러싼 외관이 얇아 다른 형태의 배터리보다 가볍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며 높은 에너지 밀도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 열 관리도 잘 되는 편에 속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공정 난이도가 높아 생산비용도 비싸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여전히 다양한 IT 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는데, 전자기동차에도 탑재되고 있어 활용 분야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배터리 형태다. 게다가 장점으로 꼽힌 외관 얇기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야기했다. 결국 모듈이나 팩으로 구성할 경우 강도 보완 기술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6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실물자산 → 금융자산 전환 등 수단 다각화로 노후생활 준비”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자산 부동산 쏠림, 불안요인 작용
고금리 시대 가계부채 증대 우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
“저성장 국면 저금리 추세 대비
대출은 변동금리, 예금은 고정”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노후대비’다. 금융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노후대비 수단을 다각화하고 위험을 분산·관리해 나가야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주요국과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축사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관련기사 2~4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미국(21.5%), 영국(13.1%), 핀란드(6.9%)와 비교해 높다. 문제는 이러한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의 대부분이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에 의존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1%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17.7%, 사적연금 7% 순이었다.

자산의 부동산 쏠림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4.4%며 이중 부동산은 94.3%를 차지한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전망’에서 가계 자산의 재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로 전망하

는데, 저성장 국면은 올해 한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도 정점의 시기를 지나는 만큼 노후준비는 저금리 추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 소득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금리 추세에 대비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 ▲예·적금은 지금 높아진 금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실물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가계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50~60세 이상의 경우 거주주택은 70~80%를 차지하는 반면 저축액은 10%대에 불과하다.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1월 경기추세가 저점 부근에 진입한 만큼 증시 변동성이 진정돼 계단식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며 “코스피가 2400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분할매수해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다.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주택을 팔 수 없던 다주택자는 지금이 세금걱정 없이 양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검수완박법’ 유지… 국힘 무효청구 ‘기각’

현재 권한쟁의심판 최종 결론

“한동훈 장관 청구인 자격 없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해를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결정의 요지다.

현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청에서 유상범·전주해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사위원장 부분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4월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5월3일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완성판’ 법안으로 평가 받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

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두 법의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같은 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1호 정책
농부 되겠다” /사진 뉴시스
▲ 국토위, TK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의
결… 심상정 반대

▲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금지’ 헌
법 불합치
▲尹정부 첫 재외공관장회의의 27~31일…
키워드는 ‘세일즈 외교’



▲韓, 5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
의안’ 공동제안 복귀
▲ 국토위, TK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
의결… 심상정 반대 /사진 뉴시스